

윤석열 《정권》이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진상을 밝힌다

세간에서는 이미 남조선에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과거 보수 《정권》들의 대북정책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예견들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내외의 그 예상을 뛰어넘어 역대 그 어느 보수 《정권》도 통과하는 극악한 동족대결무리, 벼속까지 친미친일이 재일화된 사대매국도 집단으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 놓고 있다.

그것은 윤석열 《정권》이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이른바 《국정과정》이라는 것이 명시해놓은 대북정책의 면면이

림종해주고 있다. 며칠전 첫 해외행차이탈시고 나토의 모의판에 어색하게 끼어들어 《북의 핵, 미사일위협》을 거론하며대 《강력한 대응》을 청탁한 윤석열의 처사는 그에 대한 더욱 뚜렷한 중지로 온 겨레의 커다란 경각과 분노를 자아내 고 있다.

《통일신보》는 동족에 대한 병적인 적대감과 무분별한 대결광기, 추악한 흉심으로 일관된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의 진상을 만천하에 밝힌다.

중한 도발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는 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립장을 단호히 천명한다 있다. 남조선의 윤석열 《정권》은 핵을 포

함한 우리의 전략무력이 태평양너머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보다 훨씬 더 가까이서 항시적인 대미태세에 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말약이다. 력대로 민족분열을 최적의 서식환경으로 정하고 동족대결과 사대매국으로 언명해온 퍼피보수패당의 생존방식은 윤석열 《정권》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망정체가 몸살을 앓고있는 처지에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 인권을 다 향유하고 더과 정으로 화폭과 단합의 심비한 화폭을 펼쳐고있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결코그드것이야말로 지능이 결여된 추물들의 역스러운 추대로 될뿐이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대북정책의 핵심목표는 《북비핵화》이다. 그 내용을 보면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압박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것 그리고 《북비핵화》가 선행되어야 북남관계의 진전도 이루어질수 있고 《남북경제공동발전계획》도 추진될수 있으며 북남사이의 신뢰도 구축할수 있다는것이이다. 때없이 우리를 향해 핵개발을 중단하라, 미사일발사도 포기하라고 고아대대 못해 요즘에는 우리러도 상용무장까지 내려놓으라는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강도적주장이다. 조선반도핵문제에 대한 무지로부러 부러대는 주제넘는 객기가 아닐수 없다. 핵문제는 그 발생경위와 본질로 보나, 조선반도의 현실학구도로 보나 애당초 윤석열 《정권》이 입에 올릴 사안이나거나 북과 남사이에서 논할 성격의 문제는 더욱 아니다. 비현실적이고 격어 어울리지 않는 개념을 내대며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했던 《북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CVID)》와 《신 북핵포기》를 《국정과정》로 공식화하고 기어이 실현하겠다고 실처대는것이아름 백년 가도 실현될수 없는 한갓 망상일 따름이다. 그것은 또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조선반도를 미국의 핵화약고로, 핵무기전시장으로 만들고 이 땅우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물아오려는 위협천만만 망정으로 될뿐이다. 벌써부터 오백전에 중단하였던

객기-《북비핵화》

《한미확장경제전략협약》을 재가동하고 미국의 3대핵전략자산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실효적인 핵연습을 재개하는 등 모든 살인무장장비를 총동원하려고 획책하고 있는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이 떠들어대는 《대북선제타격》망발은 핵전쟁도발의 변이될 수식어이며 핵화약고우에 불문치를 던지는것도 서슴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선전포고이다. 한갓 미친한 벌레도 함부로 불속에 뛰어들지는 않는다. 《북비핵화》의 정책기조에 따른 윤석열 《정권》의 이 모든 움직임은 사실상 조선반도비핵화를 스스로 부인하는 처사로 된다. 윤석열 《정권》이 끌어들이는 미국의 핵전략사상들의 심상치 않은 준동은 우리로 하여금 핵무력고도화결심을 더욱 굳히게 해줄뿐이다. 《북비핵화》를 떠들면 떠들수록 미국의 핵무기들이 반일되면 될수록 남조선은 외세의 치렬한 각축전장으로, 2중3중의 핵과너로 전략퇴각련이다. 20세기초엽 조선반도를 《먹이감》으로 노렸던 령강들의 정찰진이 한세기 가 지난 오늘 남조선에서 수십수백 배로 격렬하게 재현되고있다는것이 내외의 일치한 평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물론 주변강국들의 핵력격조준경에 스스로 총체를 들이민 윤석열 《정권》의 어리석음은 참혹한 재앙과 파멸을 예고하고있다. 윤석열 《정권》의 《북비핵화》는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전전포고이고 우리의 국권에 대한 가장 엄

병적인 적대의식의 산물-《북주적론》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주적론》으로 일관되어있다. 남조선군의 《국방백서》에 《북정권과 인민군은 적》이라고 조아박고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이에 준하여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것이 윤석열 《정권》이 《국정과정》에 명기한 대북정책의 또 다른 조항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주적론》으로 일관되어있다. 남조선군의 《국방백서》에 《북정권과 인민군은 적》이라고 조아박고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이에 준하여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것이 윤석열 《정권》이 《국정과정》에 명기한 대북정책의 또 다른 조항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주적론》으로 일관되어있다. 남조선군의 《국방백서》에 《북정권과 인민군은 적》이라고 조아박고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이에 준하여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것이 윤석열 《정권》이 《국정과정》에 명기한 대북정책의 또 다른 조항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주적론》으로 일관되어있다. 남조선군의 《국방백서》에 《북정권과 인민군은 적》이라고 조아박고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이에 준하여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것이 윤석열 《정권》이 《국정과정》에 명기한 대북정책의 또 다른 조항이다.

산물-《북주적론》

지른이 남조선의 현 정치풍도이며 보수와 반동이 되살아나 사회진반에 살판치고있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혐악한 현실이다. 남조선당국의 《북주적론》고취는 우리의 군사적강세에 대한 공포의 비명이기도 하다. 세계가 목격한적 없는 우리의 핵강국지위여로의 급상승에 전물한데로 부터 생억지와 궤변으로라도 공화국의 눈부신 위상을 가리워보자는데 《북주적론》의 또 다른 목적이 있는것이이다. 세계가 목격한적 없는 우리의 핵강국지위여로의 급상승에 전물한데로 부터 생억지와 궤변으로라도 공화국의 눈부신 위상을 가리워보자는데 《북주적론》의 또 다른 목적이 있는것이이다. 세계가 목격한적 없는 우리의 핵강국지위여로의 급상승에 전물한데로 부터 생억지와 궤변으로라도 공화국의 눈부신 위상을 가리워보자는데 《북주적론》의 또 다른 목적이 있는것이이다.

《북주적론》

《북주적론》은 민족의 버림을 받은 자들의 처절한 발부등질이며 머지않아 력사의 무덤에 매몰될 대결악한들의 비참한 말로의 전주곡이다. 우리 국가와 군대를 《주적》으로 삼은 이상 윤석열 《정권》은 더는 평화형위의 대화상대도, 민족단합의 일방도 아닌 철저히 섬멸해야 할 원수이다. 윤석열 《정권》은 북과 남이 마주앉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이끌어 내던 때가 얼마나 행운이었고 민족애에 몇몇한 모습이었는가를, 외세의 《동맹》강화를 부르짖는 지금의 안보상황이 그때보다 얼마나 더 위태로워졌는가를 스스로 자인하고 통감하게 될것이다.

《북인권》소통

윤석열 《정권》은 《북인권》을 대북정책의 중요한 항목으로 《국정과정》에 공식화하였다. 《북주적론》의 철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이 《정권》은 《북인권문제》를 여론화하는것이 《북정권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북인권개선》이 저들의 《책무》라고 떠들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다. 사회체제의 실업자문제가 치유불능의 사회적악재로 되고있는 주제에 단 한명의 실업자도 없는 우리를 비난해대는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극심한 사회적모순과 갈등으로 남녘

조선에 대한 괴물은 침략력사의 첫 페이지 기록이자 미국핵침략력사상 첫 패배의 상징인 침략선 《서면》호. 아시아대륙에서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중요성을 간파하고 예측진 불평등조약을 강요함으로써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불 야망밑에 미국이 조선에 들어밀었던 침략선이 바로 《서면》호였다. 조선땅에 불법침입하여 정탐행위를 일삼고 부러자들을 통유르는데도 모자라 대중강을 오르내리는 배들을 습격, 락탈하고

주변민가와 주민들에 대한 총질을 하는 등 날강도적행위를 일삼던 《서면》호가 분노한 조선사람들에 의해 대중강에 수장된 때로부터 어느덧 156년이 되었으나.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

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1950년대에는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해 조선전쟁을 일으키고 1960년대에는 무장간첩선 《유에볼로》호와 대형간첩비행기 《EC-121》을 공화국의 령해, 령공에 들어밀었으며 1970년대에는 판문점사건을

들의 급격한 쇠퇴와 거의 동시에 북에 대해 사실상 체제말살을 위한 《봉쇄정책》을 선택했다. 더우기 수년동안 연속적으로 자연재해까지 닥치자 《북체제의 소멸은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졌던것이 사실이다. 그러

해 공화국은 국가방위력을 최대한 강화하였다. 지난 4월 공화국의 불매성과 강대성, 변혁적인 발전상을 다시금 만방에 파시한 세계최고의 열병식이 보여주었던이 공화국은 이 세상 그 어떤 강국도 압승할수 있는 절대적힘을 지니었다. 공화국은 이미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소멸될것이라는데 대해 엄숙히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손아래동맹국들을 부추겨 반공화도 국외압살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저들의 핵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불장난을 끊임없이 벌여놓고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를 저들의 대북침략의 전조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강도적본성과 흉심이 15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이라는 나라가 셋을수 없는 오점을 력사에 남겼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면서 《재일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민족교육은 식민지 지배에 빼앗긴 민족성을 되찾고 확립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것이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책으로서 재일조선학생들의 민족교육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도표중고교급 2학년인 김형정학생은 《우리가 결코 차별을 감수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것, 민족교육을 탄압하거나 인종차별을 부정하는 차별에 대하여 당사자인 조교생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것을 강하게 느꼈다.》고 이번 《금요행동》에 참가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한편 《조선학교무상화배제를 반대하는 련락회》의 성원들과 도표중고학생, 교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문부과학성을 대상으로 요청활동도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2020년 이후 교육현장의 공동과제로 되

《서면》호의 침략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동강변에 있는 미국침략선《서면》호 격침기념비

일으키고 1990년대에는 공화국에 대한 《핵사찰》소통을 벌여놓았다. 또한 오늘에는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떠들며 북침전쟁소동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침략전쟁과 도발책동으로 미국이 얻은것은 과연 무엇인가. 수치와 패배뿐이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언론은 다음과 같은 글을 실은적이 있다. 《미국은 북에 있어서 가깝게는 1950년 6.25전쟁이후부터, 멀리는 19세기후반 대중강을 거슬러 침입해온 《서면》호사건이후부터 호시탐탐 한반도와 북을 노려온 최대위협세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 미국은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초사이에 동유럽사회주의나라

나 북은 지난 1930년대 황일빨찌산투쟁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반복하게 하는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유일초강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 대해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맞섰다.》 세계의 수많은 신문, 통신, 방송들도 《미국은 군사적합과 경제봉쇄로 조선을 고립압살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조선이 핵무력고도화로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재와 봉쇄는 조선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미국의 대조선전략은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강해야만 자기의 존엄과 권익을 지킬수 있는 현 세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확고히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

해 공화국은 국가방위력을 최대한 강화하였다. 지난 4월 공화국의 불매성과 강대성, 변혁적인 발전상을 다시금 만방에 파시한 세계최고의 열병식이 보여주었던이 공화국은 이 세상 그 어떤 강국도 압승할수 있는 절대적힘을 지니었다. 공화국은 이미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소멸될것이라는데 대해 엄숙히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손아래동맹국들을 부추겨 반공화도 국외압살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저들의 핵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불장난을 끊임없이 벌여놓고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를 저들의 대북침략의 전조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강도적본성과 흉심이 15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이번 《금요행동》에는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에 항의하는 도표중고교급부학생들과 교원, 조선대학교 학생 등 일본 각지에서 모여온 동포들이 참가하여 목소리를 울리었다. 참가자들은 손에 횃단막과 프랑카드를 들고 노래 《소리에 모여라 노래여 오나라》와 함께 구호들을 합창하였다. 특히 그동안 《COVID-19》감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위참가를 중단해온 도표중고 학생들이 약 3천만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번에 고교급 2학년 학생들은 비록 《금요행동》에 처음으로 참가하였지만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고무되어 힘차게 구호를 웨치고 도 웨치었다. 성토에 나선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3학년 리아야 학생은 《무상화배제는 모든 지역에서 파소관결이 확정되었지만 이는 일본

우리들의 권리를 쟁취하자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

남조선에서 박정희 《정권》의 1인파쑈독재수립책동과 북침전쟁책동, 반통일책동은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1973년 10월초 《유신》파쑈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항쟁에 일어섰다. 청년학생들의 이 투쟁은 대중적인 반 《유신》투쟁의 도화선으로 되어 곧 남조선 전 지역으로 급속히 파급되었다. 1973년 12월에 이르기까지 근 석달동안에 걸쳐 벌어진 투쟁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10여만명의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였다. 이 투쟁의 불길속에서 1974년 3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통일투쟁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민학련》)이 결성되었으며 《민학련》의 지도

사주, 민주, 통일을 위한 삼박 관계층의 투쟁

《유신》독재타도를 웨치며

에 1974년 4월 3일 남조선 전 지역에서 군사파쑈 《정권》을 반대하는 조직적이며 대중적인 투쟁이 또다시 벌어졌다. 《유신》파쑈독재를 짓부시고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1970년대후반기에 이르러 더욱 고조되었다. 1979년 8월중순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유신》독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파갑히 일어섰다.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투쟁 구조를 내세우고 8월 17일 새문안교회에 망라된 대학생들이 일

떠선데 이어 9월 4일에는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학생들이 《경북학생협의회》의 명의로 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박정희퇴진》, 《유신체철헌페》, 《긴급조치해제》 등의 글이 적힌 구호와 배라를 뿌리며 시위투쟁을 벌였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9월 11일 반 《정부》집회를 열고 《독재정권퇴진》, 《유신헌법철폐》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생존의 권리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언론의 자유, 사회의 민

주화와 《박정희퇴진》을 요구하는 민주인사들과 종교인들의 투쟁도 고조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1979년 10월에 이르러 마침내 《유신》독재의 원형을 타도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인 항쟁으로 폭발하였다.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여 벌어진 10월민주항쟁은 《유신》독재를 짓부시고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이었다. 남조선인민들의 10월민주항쟁에 의하여 파쑈적인 《유신》체

제는 총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조선에서 민주와 파쑈사이의 대결이 절정에 이르고 사회적혼란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가운데 1979년 10월 26일 악명없는 《유신》독재자가 미국의 버림을 받고 자기 심복의 총에 맞아죽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매달려 매국과 파쑈, 전쟁과 분열을 일삼아온 반역자가 받은 응당한 징벌, 력사의 심판이었다. 《유신》독재의 원흉이 제거됨으로써 파쑈적 《유신》독재체제는 수습할수 없는 일대 혼란과 막대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의 앞길에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본사기자